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장애인의 날(4. 20.),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와 전망

01 주요 내용

- 4월 20일은 제36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며 이에 현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방향과 총선 이후 정책변화에 대해 전망하고자 함
- 2016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 올해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돌봄 내실화,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등의 주요 정책에 주력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원스톱) 장애등록 이후 신청절차를 통합하여 서비스별 정보탐색이나 신청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제공, 서비스별 분절적 제공에서 탈피, 종합판정(개인 욕구, 기능 제한, 사회적 환경 등)을 통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기반구축 및 강화

- 광역지자체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 및 거점 병원 지정 통한 행동발달 증진센터 2개소 설치 및 운영
-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공공후견법인 지정을 통한 후견업무 질적 향상
- 가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 부모교육 제공

장애인돌봄 지원체계 내실화

- 주간활동서비스(학습·취미·체육 등) 시범사업('16.4~6월), 최종중장애인 심야시간 보호를 위한 야간순회서비스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확산 추진
- 최종중장애인에게 가산급여(시간당 임금의 약 10%(680원)를 추가 지급해 서비스 이용 연계 활성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 격차 해소 및 2차 장애의 예방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해소
- (거점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의 접근성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 적정 규모의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를 지정·운영 (지역 기관) 주치의, 보건소, 복지관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급여인상) 물가상승분 반영한 기초급여액 인상 부가급여액 3만원 인상 지속 추진
 (대상확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 이후 제도 변경 시 수급 희망자의 수급자격 포함 여부 재조사해 수급가능여부 안내 등 수급희망자 이력을 관리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체계 정비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일부 품목 신청자격 대상확대,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재정립 및 확충 추진, 서비스 질 관리 위한 '보조공학사' 자격제도('18년 시행) 마련

- 4.13 총선에서의 장애인 관련 주요 공약은 장애인등급제 개편, 이동권 개선, 의료 및 소득 보장, 인권보호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새누리당은 관련법 추진 예정 사항을 공약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인권 및 소득, 고용 등 장애인계의 요구 공약이 상당부분 제외
 -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인권, 소득, 건강, 고용 등 장애인계의 요구를 포함
 - 정의당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공약 유일

새누리당	①보장구 급여확대 및 취약계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②특수교사 800명 증원/특수학급 연도별 400학급 이상 설치 ③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은행 설립 ④장애인 콜택시의 타지역 이동제한 해제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인프라 구축 ⑤장애인의 질환·건강관리지원-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더불어민주당	①장애인권리보장 법제화 ②장애인소득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 확대 및 기본권 생존권 강화 ③장애인 고용활성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장애인의무고용대상 사업장 확대 등) ④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체험홈, 그룹홈 지속적 확충, 이동권 등)
국민의당	①장애인 자립 및 소득보장(고용의무를 상향조정. 민간 2.7%→3%, 정부 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취업 시 수급자격 1년 유지, 부양의무자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②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③특수교사 총원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교수방법 구축 ④이동권 개선(대중교통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⑤장애인에 대한 복지축소 중단(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정의당	①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이동권 개선, 주택개조사업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평생교육 강화, 참정권 보장,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등) ②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제정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 ③정보접근 및 문화생활, 건강보장(대체의사소통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④소득보장(부양의무자폐지,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고용장려금 인상 등) ⑤장애특성(성별, 유형)에 따른 인권보장

- 장애인등급제 개편이나 혹은 폐지나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책 간에는 의견 차이가 있어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
 - 정부는 장애인등급제의 폐지대신 중증·경증으로 개편을 주장하지만,
 - 장애인계는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대상 자격여부에 등급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 욕구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여 욕구가 있음에도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
- 한편, 각 정당들이 이동권을 주요 공약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시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이동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환경 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장애인복지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은 미약하다는 것이 현실
 - 15대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는 평균 2명 정도로, 국회에서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입법과 모니터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20대 국회의 유일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자는 안보 전문가에 가까워, 장애인계를 대표할 당사자 국회의원이 없다는 우려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 실질적인 사업 실행의 주체인 시·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하고
 - 사업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대안 마련
 -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군이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애인복지 공약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번 4.13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도 지역구의원들의 주요 장애인복지 공약을 중점 분석

- 최근 몇 년간 복지강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가장 주요한 정치 이슈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4.13총선에서도 유지되는 경향
 - 주요 선거에서 등장한 공약들이 향후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입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상세한 공약 분석이 필요
-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도 지역구의원들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총 60인의 당선인 중 28인(46.7%)만이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 당선자 모두 복지공약을 제시했으나, 세부적으로는 소득 및 일자리·노인·주거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보육·장애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임
- 경기도 지역구의원 당선인의 장애인복지 공약은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보장 > 소득·일자리 > 건강보장 > 교육기회 확대 순임
 - 61개 공약은 장애인복지관 및 기타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권 보장과 소득·일자리 보장이 각 12건, 건강 보장 8건, 교육기회 확대 7건 등으로 구성
 - 공약 내용을 보면 인프라 확대·보장구 지원 등 물리적 측면과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측면이 병존

〈표 1〉 경기도 지역구의원 당선자 장애인복지 주요공약

인프라 확충(18)	권리증진(15)
·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11) 및 지원강화(1) · 장애인시설 확대(1)· 운영지원(2) · 장애인 체육시설(2) 및 전용목욕탕 설치(1)	· 인프라 확충·법 개정으로 이동권 보장(12)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2) · 장애인 권리보장 입법화 추진(1)
소득·일자리(12)	건강보장(8)
·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일자리 확대(6) · 장애인연금 인상(3)· 장애아동 생계수당 지원(1) · 장애인 의무고용·우선구매 확대(2)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4) · 지역 내 의료접근성 강화(2)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2)
교육기회 확대(7)	장애인등급제(1)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5) · 장애인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확대(2)	· 장애인등급제 폐지(1)

- 이번 총선의 장애인 복지공약은 정당 간 쟁점공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정책이슈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개편에 높은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주요 정당에서 총선의 쟁점이 될 만한 주요 정책과제나 새로운 이슈를 제안하지 못하였고, 정당별로도 공약내용의 혼선이 존재
 - 향후 장애인 정책, 나아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여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 필요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 사회복지 현장학습 지원사업	• 기 간 : 2016. 5월 ~ 10월(6개월) • 대 상 :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로 조직된 학습동아리(15개) • 내 용 : 자발적 사회복지종사자 학습모임 대상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267-9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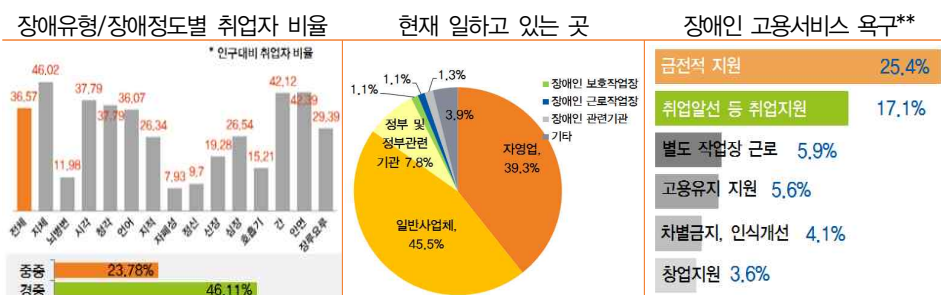
03 FACT CHECK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배려가 아닌 권리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이들은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겪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경제활동 의지를 약화시킴(한국일보, '16. 4. 20. 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경제활동에 참여한 장애인 중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9.5%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47.8%)에 비해 21.7%p 높은 수치
 - 일하는 장애인은 △가족들과의 관계 △사귀는 친구의 수 △거주지 △현재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컸음
- 반면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 중증 장애인의 52.9%가 취업 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는 경증 장애인(27.1%)보다 2배가량 높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체감하는 비율도 다르게 나타남
 - 장애인 취업자의 23.7%가 소득(임금)에서의 차별을 경험했고, 직장동료와의 관계(19.6%), 승진(13.2%)에서도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은 각 항목에서 10%p 이상 높음
- 장애인의 취업은 자립을 돕고 삶의 만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권리로서의 접근이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연계와 함께 장애인의 직장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와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04 통계로 보는 복지

장애인 취업 현황



*단위: %
**중복응답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5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6.57%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46.0%), 안면장애(42.4%), 간장애(42.1%) 순임
 -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인이 23.8%, 경증장애인이 46.1%로 경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음
- 취업 장애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은 일반사업체(45.5%), 자영업(39.3%), 정부 및 관련 기관(7.8%) 등의 순으로 조사
 - 장애인보호직업장의 종사비율은 전체 1.1%로 미미하지만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와 지적 장애인의 비율이 각각 40.3%와 19.6%로 높게 나타남
-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임금보조, 세제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17.1%),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5.9%),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5.6%) 등을 요구